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 차>

1. 수탁사의 자산 대사 기준일 설정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작 성 자	이름	송희경
	담당부서 (과)	자산운용과		직급	사무관
	국장	이윤수		연락처	02-2100-2673
	과장	고상범		이메일	gehshine@korea. kr

2021. 6. 21. 작성

정 책 책 임 자 직 위

성 명 (서 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수탁사의 자산 대사 기준일 설정			
	2.규제조문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			
	3.위임법령	자본시장법 제247조제5항제7호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1.6.28. ~ 2021.8.9.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수탁사가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해 대사 의무를 신설 함에 따라 절차 및 기준 등을 구체화할 필요			
	7.규제내용	○ 수탁사는 자신이 보관·관리중인 전체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자산 내역을 대사하도록 함			
	8.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피규제집단) 수탁사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 집합투자재산 대사를 통한 자산의 실재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 강화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편익) 집합투자재산 대사를 통해 자산의 실재성 을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 ○(비용) 위탁원의 펀드넷 시스템 등을 통해 자산 대사를 수행할 예정으로 별도의 비용 없음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13.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신탁업자의 확인 등) ① 신탁업자는 법 제2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 제247조제5항 각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 결과 법령 등에 위반된 사실이 있을 때에는 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의 법인이사인 집합투자업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위반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투자회사의 감독이사에게 그 위반의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신탁업자의 확인 등) ① 신탁업자는 법 제2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 제247조제5항 각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확인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고 있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매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영 제269조제4항제2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신탁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법령 등에 위반된 사실이 있을 때에는 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의 법인이사인 집합투자업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위반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투자회사의 감독이사에게 그 위반의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u>② ~ ④ (생 략)</u>	<u>④ ~ ⑥ (현행 제2호부터 제4호 까지와 같음)</u>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수탁사가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해 자산 대사 의무를 신설함에 따라 절차 및 기준 등을 구체화할 필요

- 수탁사는 자신이 보관·관리중인 전체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자산 내역을 대사하도록 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수탁사의 자산대사 기준일 규정 없음
	내용	- 시행령에서 자산대사 의무를 규정하였으나 대사 기준일 등 구체적인 절차 없음
규제대안1	대안명	수탁사의 자산대사 기준일 규정
	내용	- 수탁사는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전체 집합투자 재산을 대사
규제대안2	대안명	대안1과 유사한 내용으로 현재 시행중인 행정지도 방식을 활용하여 시장 자율적으로 이행
	내용	- 대안1과 유사하나, 위반시 조치 근거 없음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탁사의 자율성 극대화 • 별도의 규제사항 미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 대사 기준일 부재로 구체적인 적용이 어려워 투자자 피해 우려
규제대안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 대사를 통해 투자자에 대한 효과적·실효적 보호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 대사 관련 규제 강화에 따른 수탁사의 부담이 일부 증가
규제대안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지도를 통해 수탁사 자율에 따른 감시의무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부족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집합투자업자, 수탁사	사모펀드 제도개선 방안 마련시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였으며,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21.6.10. 금융위 자산운용과장 주재 시장간담회 등)	제도개선안에 반영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법안 마련 과정에서 금감원·금투협 등으로 구성된 TF를 통해 상시 협의하였음	제도개선안에 반영
투자자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21.6.23. ~ 8.2.)	-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실효성 있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사모펀드 시장 형성을 위해서는
규제대안1이 바람직함

○ 현행안을 유지할 경우 수탁사의 자산 대산 기준일이 없어 적시에 자산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투자자 보호가 어려우므로 개선 필요

○ 규제대안2의 경우, 행정지도 등은 규범력과 제재 가능성이 한계가 있어 실효성 확보가 곤란함

- 이제까지 법령 및 감독당국의 사전규제를 최소화하여 시장 참여자 스스로가 규율해 나가는 자율·창의적 시장을 지향해 왔으나,
- 최근 운용사·판매사·수탁회사·투자자 등의 자율적인 시장규율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발생
- 따라서 행정지도 등을 통해서는 시장참여자들의 규율 이행을 담보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에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됨

3. 규제목표

□ 분기별 집합투자재산 대사를 통한 자산의 실재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 강화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 본 규제는 수탁사의 자산대사 기준일을 구체화하여 분기별 대사를 의무화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에 기여
- ☐ 규제내용은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라는 자본시장법령의 취지를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보임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해당사항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해당사항 없음

○ 타법사례

해당사항 없음

III.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본 규제는 자산운용시장의 신뢰회복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 이로 인한 시장 활성화는 신탁업자인 피규제자의 이익에 해당
- 본 규제는 현재 행정지도를 통해 시행 중인 사항이며 위반시 제재 가능성 또한 있어 적극적 이행 기대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현재 행정지도를 통해 이미 시행 중인 규제로서, 기존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여건상 규제 집행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재정적 집행가능성

-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20. 4월 발표한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의 일환이며, 별도 특이사항은 없음

2. 향후 평가계획

- 제도 운영과정에서 규정 준수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금감원·업계 등과 협의하여 미비점을 보완할 예정

3. 종합결론

- 본 규제는 수탁사의 자산대사 기준일을 명시하여 분기별로 자산대사가 이루어지도록 한 것으로서,
 - 투자자 보호와 신뢰 회복에 따른 자산운용시장 활성화 등을 고려할 때 피규제자의 비용보다 편익이 클 것으로 예상됨